

'21. 3. 25, 12:00부터
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

- 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 -

2021. 3. 25.

관계부처 합동

목 차

I. 추진 배경	1
II.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	2
III. 추진 방향	5
IV. 주요 추진 과제	6
1. 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	6
2. 화물차·버스 등 사업용 차량 사고의 획기적 감소	9
3. 이륜차 사고 적극 감축 및 운전자 안전운전 책임성 강화 ...	11
4. 사고 예방적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·확충	13
5. 사람우선의 교통문화 정착 및 추진체계 강화	15
V. 추진계획	17

I 추진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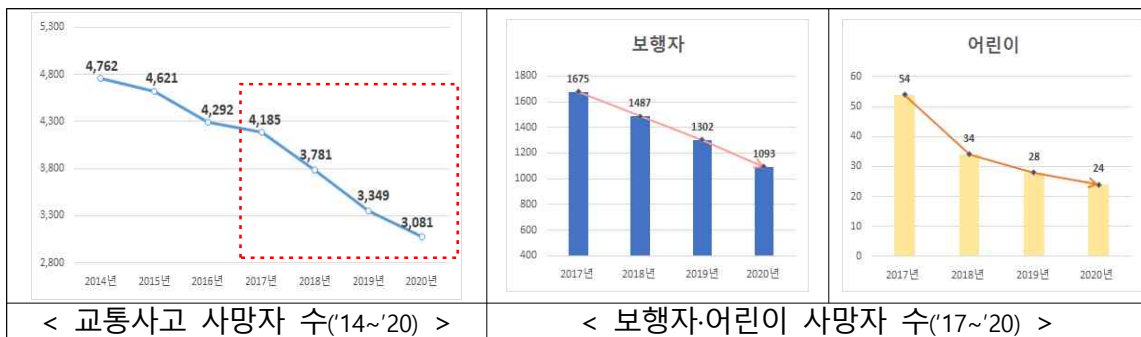
-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**교통안전대책***을 적극 추진하여, 지난 3년간 사망자가 **26.4%**(△1,104명) 감소하는 큰 성과

* 교통안전 종합대책(18.1),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방안(20.1),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(20.4) 등

- 교통 사망자는 '17년 4,185명에서 '20년 3,081명으로 감소하였으며, 3년간 연평균 사망자 감소율 9.7%는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

* '03~'07(5년간 평균 △3.1%) / '08~'12(5년간 평균 △2.6%) / '13~'17년(5년간 평균 △4.9%)

- 분야별로는 보행자 34.7%, 어린이 55.6%, 음주 34.6% 등 크게 감소



- 이러한 성과는 도심부 속도 하향 도입, 음주 처벌 등 제도 강화, 계도·단속, 시설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통해 이뤄졌으나,

- OECD 선진국 비교시, 인구 10만명당 사망자*는 5.9명('20년)으로, 아직도 OECD 평균 5.6명('18년)에는 미흡하며,

*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: 7.3명('18, OECD 29위) → 6.5명('19, 26위) → 5.9명('20, 23위)

- 특히, 보행자가 전체 사망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%('17~'19)로 OECD 평균(20.5%) 대비 2배 높은 수준(OECD 27/28위)

- OECD 상위권의 교통 안전국가('22년 3.9명, 10위)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 문화 및 시스템 측면의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 필요

- 특히,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를 구축하고, 안전우선 교통문화를 정착하며, 화물차·이륜차 등 취약분야에 대해 선제적 대책 마련

II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

□ (수단별) 3년간('17~'19), 교통사고 사망시 상태별로 구분하면, 보행자가 39.5%로 가장 많고, 자동차 탑승 34.5%, 이륜차 탑승 19.9% 순 발생

* 유형별 : 차대차(車對車) 41%, 차대사람 38%, 차량단독 21%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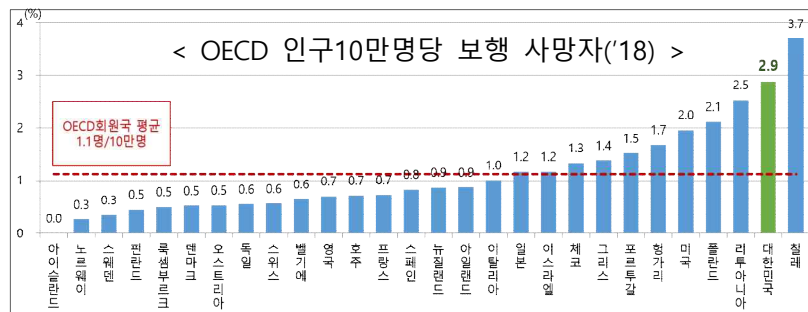
○ '20년 보행 사망자는 1,093명으로 전년비 크게 감소(△16.1%)하였으나, 아직도 전체 사망자의 35.5%를 차지

* 보행사망자(전체 사망 중 비율) : '17. 1,675명(40.0%) → '18. 1,487명(39.3%) → '19. 1,302명(38.9%)

- 사망자의 56.8%는 횡단 중(횡단보도 內 22.4%, 外 34.4%)에 발생하고, 야간(56%)이 주간(44%)에 비해 1.3배 높게 발생

* 3년 평균 보행사망자(1,488명 '17~'19) 중 횡단보도 내 333명(22.4%), 횡단보도 외(무단횡단) 512명(34.4%)

- 연령별로는 고령자(65세 이상)가 절반 이상(55.8%)이며, 주로 도시부 도로에서 다수(64%) 발생



⇒ OECD 대비 크게 부진한 보행자 사망사고를 적극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,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로 전환 필요

□ (차량별) 3년간('17~'19), 차량별 사망자 수는 승용차가 가장 많으나, 치사율은 화물차(3.1명)·이륜차(2.8명)가 승용차(1.2명)의 2배 이상

* 가해차량 용도별 : 일반 승용차 41%, 사업용 차량 19.5%, 이륜차 14.1% 등 발생

** 승용차 승차 사망자는 OECD 8/29위 수준('18)

- 일반 승용차는 전방주시태만 등 안전운전 불이행(68%), 과속(21.6%), 중앙선침범(8.8%), 신호위반(6.7%) 순으로 발생

- 한편, 사업용 차량은 전체의 7% 수준으로 비사업용에 비해 적으나, 사망자*는 전체의 19.5% 수준을 차지하며, 이륜차도 14.1% 차지

* 사업용 사망(전체中) : '17. 821명(19.6%) → '18. 748명(19.8%) → '19. 633명(18.9%) → '20. 575명(18.7%)

- (화물차) 사업용 차량 중에서 화물차* 비중이 32.5%로 가장 높고, 그 외 택시·버스·렌터카 순으로 발생

* 화물차 사망(사업용中) : '17. 255명(31.1%) → '18. 251명(33.6%) → '19. 209명(33.0%) → '20. 210명(36.5%)

- 화물차 사고는 졸음·전방주시태만 등이 주요 원인이며, 고속도로상 대형사고 발생 위험도 매우 높음

- (렌터카) 사업용 중 14%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, 특히, '20년은 사망자가 전년比 증가 * 렌터카(사업용中) : '19. 82명(13.0%) → '20. 96명(16.7%)

- 불법 명의 대여, 면허 미확인 등 무면허 운전 위험이 높은 특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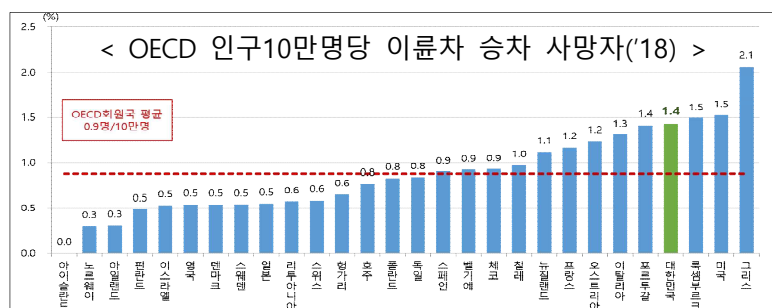
⇒ 사고 비중이 높은 화물차,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 필요

- (이륜차) 배달서비스 확대 등으로 '20년 이륜차 사망자는 증가 ('19. 498명 → '20. 525명)하였으며, 전체 사망자 중 비중이 증가

* 이륜차 사망(전체中) : '17. 564명(13.5%) → '18. 537명(14.2%) → '19. 498명(14.9%) → '20. 525명(17.0%)

- 신호위반(16.1%), 중앙선침범·교차로통행위반(11.5%) 비율이 일반 차량보다 높고, 치사율도 높은(사고100건당 사망자 2.8명) 수준('17~'19)

- 이륜차 승차 사망자는 OECD 하위권(25/28위, '18) 수준



- (PM) 新교통수단인 개인형 이동수단(PM)이 공유경제와 함께 확산되고 있으며, 운전자 보호에 취약하여 사망자도 증가 추세*

* PM 사망 : '17. 4명 → '18. 4명 → '19. 8명 → '20. 10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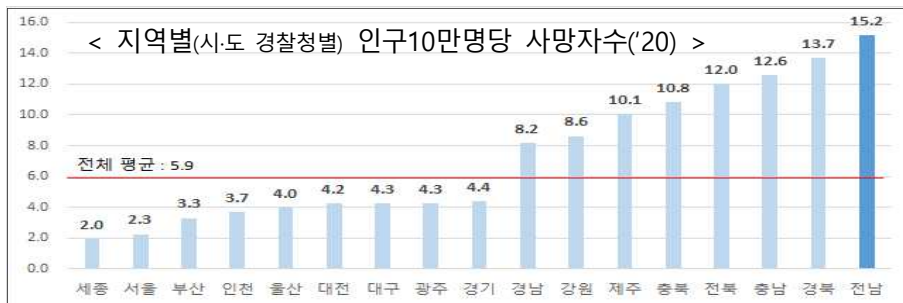
- (음주) 처벌·단속 강화 및 의식개선 등을 통해 3년간 34.6%('17. 439명 → '20. 287명) 감소하였으나, 아직도 음주 사망은 전체의 9% 수준 차지
 - * 음주운전 사망 : '17. 439명 → '18. 346명 → '19. 295명 → '20. 287명

⇒ 이론차·PM 사망자 증가에 대응한 안전 대책 추진 및 음주사고 등 근절 필요

- (연령별) 3년간('17~'19), 20세 이하는 4.5%, 21~40세 14.8%, 41~65세 36.8%이며, 65세 이상 고령자가 43.9%로 다수 차지
 - (고령자) 3년간 24.1%('17년 1,767명 → '20년 1,342명) 감소하였으나, 전체 사망자 중 비중은 증가 추세
 - * 고령자(전체中) : '17. 1,767명(42.2%) → '18. 1,682명(44.5%) → '19. 1,523명(45.5%) → '20. 1,342명(43.6%)
 - 특히, 고령 보행자(628명)는 전체 보행사망자(1,093명)의 56.1% 차지('20)
 - (어린이)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3년간 절반 이상 감소('17년 54명 → '20년 24명, △55.6%)
 - * 어린이(전체中) : '17. 54명(1.3%) → '18. 34명(0.9%) → '19. 28명(0.8%) → '20. 24명(0.8%)

⇒ 고령자 친화적 신호체계, 보호구역 관리 등 부처 합동 「고령자 교통안전 종합 계획(20.10)」 및 「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대책(20.1)」 시행 철저로 사고 근절

- (도로별) 3년간('17~'19) 교통사고 사망자는 고속도로 6.2%, 국도 16.8%, 지방도 이하 및 기타 도로 77% 수준 발생 중
 - 지역별로는 특광역시와 道간 사망자 발생 편차가 크고(최대 7.5배), 특히, '20년은 고속도로(8.3% ↑), 국도(3.1% ↑) 사망자가 증가



⇒ 도로관리 주체별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철저한 관리체계 구축 필요

Ⅲ 추진 방향

목표

'21년 2,460명(△20%), '22년 2,000명으로 감축, OECD 상위권 진입
 < 10만명당 사망자('18년 OECD 기준 : '20년 5.9명(23위) → '21년 4.8명(16위) → '22년 3.9명(10위) >

추진 방향

◆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 체계 구축

◆ 사업용 · 이륜차 · 인프라 등 분야별 안전관리 강화

◆ 사람 우선 교통문화 확산 및 범정부 체계 구축

주요 핵심분야	중점 추진과제
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국 도심부 속도 하향 전면 시행 ○ 보행자 최우선 교통 패러다임 전환 ○ 보행자 안전 인프라 및 어린이·고령자 안전 환경 조성
화물차 · 버스 등 사업용 차량 사고의 획기적 감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용 차량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점검 ○ 화물차 과적·적재불량 관리 및 단속 ○ 화물차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 등
이륜차 사고 감축 및 운전자 안전운전 책임성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륜차 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단속 강화 ○ 이륜차 안전용품 보급·홍보 및 PM 관리 ○ 운전자 안전운전 및 책임성 강화
사고 예방적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 · 확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고 예방적 도로 환경 조성 및 안전시설 확충 ○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구조물·터널 관리 강화 ○ 안전 운행 유도를 위한 도로 홍보·단속
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 및 추진체계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람 중심의 문화 확산을 위한 전방위 홍보 ○ 범정부 교통안전 관리체계 구축·운영

IV 주요 추진 과제

1. 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

- ◆ 도심부 제한속도 전면 시행 및 정착
- ◆ 보행자 최우선 교통 패러다임 전환
- ◆ 보행자 안전 인프라 및 어린이·고령자 안전 환경 조성

① 전국 도심부 속도 하향 전면 시행('21.4.17~, 경찰청·행안부·국토부)

- (도심부 속도하향)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전국 도심부 차량 제한 속도를 저감하는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

* 도심부 기본 제한속도를 60→50km/h 하향하고, 속도표지 등 신설·교체

- 도심부 속도하향 이행 실천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·제도 및 단속, 안전속도 5030협의체를 통해 추진 상황 점검 및 미흡사항 개선

◇ 안전속도 5030 도입에 따른 효과분석(68개소, 도로교통공단)

교통사고건수(건)			사망자수(명)			사상자수(명)			치사율		
전	후	증감률	전	후	증감률	전	후	증감률	전	후	증감률
834	723	-13%	11	4	-64%	1,181	1,015	-14%	1.32	0.55	-58%

※ 속도하향(60→50km/h)에 따른 통행시간 증가는 4.8% 수준(평균 13.4km 주행, '18.12)

- (전방위 홍보)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국민 참여 확산

- 속도하향 시행 등 달라진 교통문화 등에 대한 안전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고, TV(공중파)·SNS·옥외매체 등에 전방위 송출



② 보행자 최우선 교통 패러다임 전환(경찰청·행안부·국토부)

- (보행자 우선 제도) 보행 사고 위험성이 높은 비신호 횡단보도,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가 우선 보호받도록 제도 개선
 -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'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'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*를 부여(도로교통법 개정, '21.上)
 - * 現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'통행하고 있을 때'에 운전자에 일시정지 의무 부과
→ 改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'통행하려고 하는 때'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과
 - 보·차도 미분리도로 등에서는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*
 - * 도로교통법(보행자 통행우선권 부여) 및 보행안전법(보행자 우선도로 지정) 개정('21)
- (보행 우선 교통체계)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및 일시정지 표지(Stop-sign) 확산 등 보행자 우선 교통 체계로 본격 전환
 - *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등에 우선 설치 및 확산 등 추진



- 횡단보도, 어린이보호구역 등 사고 발생 시 보험료 할증 강화 등 운전자의 보험책임 강화를 통한 보행사고 감축 추진
 - * 대법 판례('20.12) :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사고 시 운전자 책임으로 판시
 - ** 중장기적으로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감소 방안도 검토
- (보행안전 기본계획) 보행 안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국가 보행안전 기본계획('22~'26) 수립 및 보행안전 위원회 구성·운영*
 - *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('20.12)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('21.6)
- 보행안전지수 및 보행환경 정책연구센터 도입으로 지자체별 성과 평가·환류 등 보행안전 정책 추진 체계도 강화

③ 보행 안전 인프라 적극 확충(국토부·행안부)

- (보행안전 시설)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(39개소), 횡단보도 조명시설(연 1천개소)·보도(30개소) 설치 등 보행 인프라 확충
 - 무단횡단 방지펜스, 스마트 횡단보도 등 보행 안전 시설 확산
 - * 지역교통안전 환경 개선, 스마트 솔루션, 우리 동네 개선 사업 등 연계
 - 도시지역 도로의 저속통행(설계속도 50km/h↓) 유도, 보행자·고령자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「사람중심 도로 설계지침」 제정('21.上)
- (마을주민보호구간)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구간*을 확충하고('21. 60개), 지방도로에도 5개년 정비계획('20)을 토대로 확산 추진 검토('22~'26)
 - * 제한속도 하향(80→60km/h 등) 및 과속단속카메라 등 설치 / 3년간('21~'23) 180개

④ 어린이·고령자 등 교통약자 안전 환경 구축(행안부·경찰청·국토부·교육부)

- (고령자) 노인보호구역을 지속 확대('19. 1,932개소 → '22. 2,700개소), 고령자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 등도 보호구역 지정·확대(도교법 개정, '21)
 - 고령자 사고 다발지점 대상 합동 점검·시설개선 및 노인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개선 확대('20. 120억 → '21. 140억(국비70억))
 - 고령자 면허반납 시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에 정부지원('21. 13.9억), 위험구간(안개 등) 중심 시인성이 높은 조명식 도로표지 확충('21. 382개)
- (어린이)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 '22년까지 전국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, 신호등 확충 * '20. 3,827대 → '21. 12,686대 → '22. 20,688대(누계)
 - * 옐로카펫 등 설치를 통한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('20. 237개교 → '21. 900개교)
 -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/h 이하로 하향, 불법 주정차 과태료·범칙금을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*
 - * 일반도로(4만원, 승용차 기준)의 2배 → 3배로 상향(도교법 시행령 개정·시행, '21.5)
 - 체계적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보호구역 평가·공인제도 도입 검토

※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대책('20.1) 및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('20.10) 시행 철저

2. 화물차·버스 등 사업용 차량 사고의 획기적 감소

- ◆ 사업용 차량 관리제도 개선 및 안전점검 강화
- ◆ 화물차 과적·적재불량 집중 관리 및 단속
- ◆ 화물차에 대한 차량 안전 기준 강화 등 추진

1] 사업용 차량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점검(국토부)

- (사업용 휴게시간) 졸음운전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장거리 운행이 잦은 고속·시외·전세버스, 화물차의 휴게시간 준수 집중 점검
 - 운행·배차일지 등 휴식 보장내역을 점검하여 위반 시 행정처분
 - 화물 운전자 적정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기존 4시간 운전 30분 휴식 → 2시간 운전 15분 휴식으로 개선(화물차법시행규칙 개정·시행, '21.3)
- (버스·택시) 여객운수종사자 음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('21)
 - *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시(現 면허취소시)에도 운수종사 자격 취소(여객법 개정, '21)
 - 버스 난폭운전, 안전 조치 미준수 등으로 주요 교통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 대한 집중 점검 실시
- (렌터카) 렌터카 명의 대여·알선 시에 처벌*토록 하고, 렌터카 대여 시 면허 미확인 업체에 대한 처벌(50만→500만) 강화('21.3)
 - *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(여객법, '21.1~)
 - 안전점검 대상에 렌터카 사업자 포함(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, '21.上)
- (사업자 책임 강화) 사고 많은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공제료(보험료) 산정시 사고 할증비율 상향 등 책임성 강화 방안 검토

2] 화물차 과적·적재불량 관리 및 단속(국토부·경찰청)

- (안전 단속) 판스프링 등 화물차 불법 장치에 대해 경찰·지자체·공단 합동 단속 강화, 분기별 관계기관 합동 과적 단속 추진
 - * 불법튜닝 등 단속 강화를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(공단) 확충 추진('21.13명 → '22. 28명)

- (검사 기준) 화물차 정비 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예방을 위해 자동차 검사기준 강화(자관법 시행규칙 개정, '21,上)
 - * 충격 완화를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가 부식 또는 손상된 경우, 현재 자동차검사에서 시정권고만 하고 있으나 향후 부적합판정 조치
- (과적·적재) 과적단속원의 권한을 적재 제한까지 확대 추진 및 화물 무게 등 허위 기재한 화주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(도로법 개정, '21)
 - AI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고속도로에 화물차 진입 시 자동으로 적재불량 단속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('21년 5개소 운영, '22년 확대)
 - 적재 불량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표준화된 화물 적재 방법 등 시각화 자료를 제작하여 화물차 운전자에 배포·교육('21)
- (안전 순찰 등) 졸음운전 취약시간(03~06시, 15~18시) 알람 순찰 확대, 화물차 후부 왕눈이 야광 스티커(도공, 年2만여개) 부착 등 추진

③ 화물차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 등(국토부)

- (차량 안전성 강화) 정면 충돌 사고에 취약한 소형화물차의 운전자 보호를 위해 충돌기준 도입(자동차기준 개정, '21.12) 및 캡오버형 단종 유도
- (첨단안전장치 확대) 졸음사고 등 예방을 위해 총중량 3.5톤 초과 화물·특수차에 차로이탈·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확대
 - * 現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·특수차 → 총중량 3.5톤 초과 화물·특수차(신규 제작 차량, '21.7~)
 - 향후, 자동차 기준 개정 및 제작사 협의 등을 통해 비상자동제동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전체 차량으로 확대* 추진
 - * 비상자동제동장치(자동차 기준 개정 추진, '21), 차로이탈경고장치(제작사 협의·기본사양 적용, '21上)
- (DTG 기준) 운행기록장치(DTG) 제작사양에 現 기록기능 외에 통신 기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기준 강화(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, '21)
- (비영업용 차량 안전) 일정대수 이상 화물차 보유 업체에 대한 안전컨설팅 도입, 건설·덤프트럭 안전기준 강화(건설기계관리법) 등 검토

3. 이륜차 사고 적극 감축 및 운전자 안전운전 책임성 강화

- ◆ 이륜차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단속 강화
- ◆ 이륜차 안전용품 보급·홍보 및 PM 관리 기반 마련
- ◆ 일반 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책임성 강화

① 이륜차 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단속 강화(국토부·경찰청)

- (이륜차 관리제도) 관리체계가 미비한 이륜차에 대해 신고·정비·검사·폐차 등 단계별 종합 관리체계 마련('21.上)
 - * 정비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전문자격증 및 운행안전 확보를 위한 검사제도 등
 - 이륜차 번호판의 시인성 향상 등을 위해 現 지역명 등으로 구성 되어있는 번호판 체계 개편 검토('21)
- (이륜차 배송업) 소화물 배송 대행사업 인증제 및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통해 종사자 안전교육, 보험관리 및 공정 계약 여건 마련
 - * 「생활물류법」 제정(21.1)에 따른 세부기준 등 시행령·시행규칙 마련(21.6)
 - 종사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이륜차 공제조합 설립, 사업자의 안전·보건조치 및 정부 개선권고 조치 등 세부 사항 규정
 - 인증업체는 표준계약서·보험·교육 등 안전사항을 준수토록 하고, 중·장기적으로, 이륜차 배송 등록제 및 운전 자격제 도입 검토
 - 플랫폼 업체 배달원이 면허시험장, 체험교육센터 등에서 안전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업체 교육 강화(업체-교육기관 MOU 체결 등)
- (단속 강화) 상습법규 위반지역,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암행 캠코더 등을 활용하여 교차로 신호위반 등 위법행위 단속 강화
 - 이륜차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 활용 단속 시범사업 추진('21)
- (공익 신고 확대) 일반 시민 및 운수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이륜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대폭 확대('20. 2천명 → '21. 5천명)
 - 신호위반, 중앙선 침범 등 중대법규 위반 및 사고가 많은 야간 시간대에는 공익신고 인센티브 상향

② 안전용품 보급·홍보 및 PM 관리(국토부·경찰청 등)

- (안전용품 보급·홍보) 농촌 마을, 이륜차 사고 급증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모(1만개) 및 후면반사판·반사지 등 집중 제작·보급
 - 읍·면 지역농협·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안전교육을 확대하고, 교통안전 방송을 제작하여 읍·면사무소 배포 및 마을단위 송출
 - 주요 통행로·사고 우려 지점에 이륜차 안전 운행 현수막 설치 확대
 - (PM 관리 체계) 대여사업 신설 및 등록제, 대여사업자 의무보험, 안전규정 등을 포함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률 제정('21.上)
 - 법률 제정 前, 민·관 협의체('20.11~)를 통하여 대여 연령*, 안전 규정 및 주정차 가이드라인 준수 등 지속 추진
- * 면허 보유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('21.5) 前, 대여 연령 제한(18세 이상) 등 先 적용

③ 운전자 안전운전 및 책임성 강화(국토부·경찰청)

- (안전운전 책임강화) 음주운전 등 중과실로 인한 사고시 경제적 책임부담을 강화하는 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 운전 유도
 - 음주·무면허·뺑소니 사고시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강화*, 마약·약물 운전도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포함(자배법 개정, '21)
- * 現 구상 범위 : 음주 - 대인 1천만원, 대물 5백만원 뺑소니 - 대인 3백만원, 대물 1백만원
- 12대 중과실(교통사고처리특례법)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상대방 책임이 일부 있더라도 차수리비(대물)를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
- *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추진('21)
- (위험운전 관리) 도로 위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토록 처벌 강화(도교법 개정, '21)
 - (음주 단속 강화) 비접촉식 감지기 활용 음주 단속(주 1회 이상), 상습 음주차량 압수, 동승자 방조 처벌 적용 등 적극 관리
 -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규격 마련 및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장치 도입(도교법 개정) 검토

4. 사고 예방적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 · 확충

- ◆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환경 조성 및 안전시설 확충
- ◆ 구조물·터널 등 대형사고 예방 강화
- ◆ 안전한 운전문화 정착을 위해 도로 홍보·단속 추진

① 사고 예방적 도로 환경 조성 및 안전시설 확충(국토부·행안부)

- (취약도로 개선) 사고 잦은 곳, 급커브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 등에 대해 도로 집중 개선 추진 * '21. 국도 160개소, 지방도 373개소
 - 사고 다발 구간에 대해 교통안전점검 특수차량을 이용하여 구조·시설상태 등을 정밀 점검·개선('21, 민자 5개 구간)
 - 국도 상 갓길이 협소하여 보행자·경운기 등 통행 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확장 정비 실시
 - * 최소 유효폭(0.75~2.0m)보다 협소한 구간 정비('21. 35개소, '22. 20개소)
- (쉼터 확충) 졸음쉼터 17개소(고속도로 7개소, 국도 10개소)를 신규 설치하고, 기존 졸음쉼터에 대해서도 화장실·벤치 등 편의시설 확충
 - * 졸음쉼터 운영 개수 : 고속도로 230개소, 국도 53개소
 - 화물차 운전자 편의를 위해 신설 휴게소 위주 화물차 라운지 8개소(現 46개소)를 신설하고, 화물차 전용 가변주차장(9→12개소) 확대
- (안심도로 확산) 차로 폭 좁힘, 지그재그형 도로 등 차량의 자연스러운 속도 저감을 위한 안심도로(교통정온화) 공모전 시행('21.8)
 - * 공모 결과를 반영하여 지침 개정('21.下) 및 도시재생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연계 확산
- (가로등 확충) 야간 시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가로등 미설치 구간에 기상·조도 등을 감지·동작하는 스마트 가로등 설치
 - * 경부선 가로등 설치율 30%(現126km) → 79%('27. 329km)로 확대('21. 17km 40억)
- (회전교차로 확대) 사고 예방효과가 높은*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('19. 71개소→'21. 81개소) 및 체계적 정비를 위한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('21)
 - * 지난 10년간('10.~'19.) 사업 시행 결과, 교통사고 43% 감소, 사망자 77% 감소

2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구조물·터널 관리 강화(국토부)

- (교량·비탈면 모니터링) 계측기·GPS 등 센서를 각종 IoT와 결합하여 교량·비탈면 등에 대한 위험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
 - * 노후교량(1,966개), 비탈면(500개소) 대상 관리체계 구축('21~'25, 1925억)
- (터널안전 시설) 터널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3등급 터널에 제연설비·진입차단설비 등 방재 설비 보강(3등급 11개소, '21)
 - * 2등급(1km↑) → 3등급(500m↑) 터널까지 제연설비·진입차단 설비 등 설치토록 방재지침 개정('20.8)
- 터널내 위급 상황 시 진입차단·제연설비 등의 원격 제어체계 구축
 - * 전국 국도터널('22. 기준 859개소) 대상, 5개 지방청(76개권역)별 구축(~'22, 1,182억원)



- (충돌방호시설) 차로 이탈, 충돌 등으로부터 운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방호울타리·충격흡수시설 성능조건 개선(지침 개정 추진, '21)
 - 교량 등 위험 사고 우려 지점 중심 강화된 방호울타리 설치(5km 50억, '21)

3 안전 운행 유도를 위한 도로 홍보·단속(국토부 등)

- (안전띠 착용) 고속도로 상에 안전띠 미착용 단속 장비를 시범 구축·운영하고(2개소, '21.10), 장비 추가 확충('22)
 - VMS·현수막·영상 등 활용 전좌석 안전띠 착용 적극 홍보 추진
- (고속도로 합동 단속) 압행순찰차(경찰청), 드론(도공) 등 기관 합동 과속, 난폭운전, 갓길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 집중 단속(월 2회)
- (단속장비 설치 권한) 경찰청·지자체 외 도로관리청도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 가능토록 근거 마련(도로교통법 개정, '21)
 - * 적극행정 과제를 통해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단속 장비 우선 설치 추진

5. 사람 우선의 **교통문화** 정착 및 추진체계 강화

- ◆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전방위 홍보 추진
- ◆ 범정부 교통안전 관리체계 구축으로 대책의 집행력 제고

①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전방위 홍보(부처 합동)

- (Key 메시지) 보행자 안전(보행자 First)을 핵심 메시지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, 안전속도 5030 등 기관 합동 적극적 홍보 추진
 - 보행자 안전을 주제로 메인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주요 지상파 매체 및 뉴미디어·옥외매체를 활용하여 노출
 - * KBS, SBS, EBS 등의 주요 시청시간대(18~22시) 활용 교통안전 홍보 추진(3~4월)
 - ** 교통안전 프로그램(SBS 메인블랙박스, 뉴스채널(YTN 등), 라디오(출퇴근시간대) 연중 홍보
 - 화물차·이륜차·PM 등 주요 타겟별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대상별 (화물차·이륜차운전자, 청소년 등) SNS 채널 등을 통해 맞춤형 홍보
 - 운전자 안전을 위해 전좌석 안전띠 착용토록 TV·라디오·VMS 등 활용 집중 홍보하고, 행락철 등 주요 시기별로 안전 홍보 강화
- (메신저 활용 강화) 방송인 등을 활용하여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, 공익광고 및 캠페인 등 참여를 통해 교통안전 관심도 제고
 - 시청률 높은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교통안전 상식과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유도
 - 인지도 높은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를 통해 국내·외 교통문화를 흥미롭게 비교하고, 교통안전 법규 등을 쉽게 전달
 - * 주말·평일 등 시간대를 다양화하고, 교통안전 유형별로 메시지를 전달
- (기관 협업) 기관별 핵심 이슈를 설정(예: 행안부, 어린이보호구역 등), 정부보유 채널(보도자료·광고·캠페인 등)을 통해 주요 타겟 대상 집중 홍보
 - 민·관 홍보협의회*를 통해 홍보 콘텐츠 공유 및 협업 필요 사항을 지속 논의하고, 기관간 역량을 집중하여 홍보
 - * 중앙부처, 공공기관(도공, 교통안전공단, 도로교통공단), 민간(손보험, 안실련, 운수단체 등)

- 기관 합동으로 계절별·시기별(명절·살얼음 등) 맞춤형 홍보 및 합동 토론회·세미나 등을 통해 교통안전 관심도 제고
- 민간 기업과 연계한 홍보도 병행 추진하여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
- (맞춤형 교육) 노인복지관에 찾아가는 고령자 교육, 어린이·청소년 수업 연계 체험형 교육 등 맞춤형 교육 지속 시행

② 범정부 교통안전 관리체계 구축·운영(국조실·국토부·행안부·경찰청 등)

- (범정부 추진체계)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교통안전 대책 점검(분기별) 및 실무 점검협의회를 통한 추진 현황 수시 점검
 - * 중앙부처 장차관급(국조실, 국토부 등)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추진현황 점검
- 감축 부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부처 합동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, 지역별 경각심 제고를 위해 사고 통계 분기별(필요시 월별) 공표
 - *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간 교통사고 정보 공유 강화
-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를 위한 신호·속도·통행체계 관리 방안, 사업용, 이륜차 등 분야별 안전점검 회의로 추진 현황 점검·관리
- (도로 관리체계) 고속도로·국도는 도공·지방국토청·도로교통공단·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협업 점검·단속 및 시설 개선 추진
 - 특히, 국토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적극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지방국토청 내 교통안전조직을 설치하여 도로 안전관리* 강화
 - * 국토부 사고 관리, 원인조사 및 시설개선, 권역별 교통안전 협의체 구성·운영 추진
- (지역별 안전강화) 지역별 안전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독려를 위해 중앙-지자체 교통국장급 점검회의를 분기별 실시
 - 지역 교통안전 추진·협업 강화를 위해 시민단체 등 참여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*(전국 243개) 활성화(지역별 성과 평가 및 우수시책 공유 등)
 - * 구성 : 지자체, 경찰청, 국토관리청, 교육청, 공공기관, 시민단체, 운수업체 등
- (지자체 안전 노력 제고) 기초 지자체 단위 '21년도 "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도시" 5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, 제로 지자체에 포상 등 시행

V 추진 계획

과제 내용	추진계획	일정	부처
1-1. 전국 도심부 속도하향 전면 시행			
① 도심부 속도하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도심부 속도하향 시행, 홍보·계도 및 단속 ▶ 안전속도 5030 협의회 운영 	'21.4~	경찰청 행안부 국토부
② 전방위 홍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안전속도 5030 관련 TV·SNS 등 홍보 	연중	경찰청 행안부 국토부
1-2. 보행자 최우선 교통 패러다임 전환			
① 보행자 우선 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확대(도교법 개정) ▶ 이면도로 보행자 통행 우선권(도교법 개정) 	'21.6	경찰청
②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차량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(도교법 시행규칙 개정) ▶ 일시정지 표지(Stop Sign) 확산 ▶ 보행사고 감소를 위한 보험체계 검토 	'21.12	경찰청 국토부 등
③ 보행안전 기본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보행안전법 하위 법령 개정 ▶ 국가보행안전 기본계획 수립 	'21.6 '21.12	행안부
1-3. 보행 안전 인프라 적극 확충			
① 보행안전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시행 ▶ 횡단보도 조명시설 및 보도 설치 ▶ 무단횡단방지펜스, 스마트 횡단보도 등 ▶ 사람 중심의 도로설계 지침 재정 	'21.12 '21.상	행안부 국토부 등
② 마을주민 보호구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도부 마을주민 보호구간 확충 ▶ 지방도로 마을주민 보호구간 확산 	'21.12	국토부 행안부
1-4. 어린이·고령자 등 교통약자 안전 환경 구축			
① 고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노인보호구역 및 지정 요건 확대(도교법 개정) ▶ 면허반납 인센티브 국비 지원 ▶ 사고다발지점·보호구역 개선 ▶ 조명식 도로표지 확충 	'21.6 '21.12 '21.10 '21.12	경찰청 행안부 국토부

과제 내용	추진계획	일정	부처
② 어린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호구역 인증제 도입 ▶ 어린이 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 및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하향 ▶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	'21.12 '21.12 '21.5~	행안부 교육부 경찰청

2-1. 사업용 차량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점검

① 사업용 휴게시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업용 차량 휴게시간 준수 여부 점검 ▶ 화물차 휴게시간 기준 개선(화물차법 시행규칙) 	연중 '21.3	국토부, 지자체
② 버스·택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여객운수종사자 음주 원스트라이크 아웃(여객법 개정) ▶ 버스 난폭운전·안전조치 미준수 점검 	'21.상 연중	국토부, 지자체
③ 렌터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렌터카 명의 대여·알선 처벌(여객법 개정) ▶ 면허미확인 업체 처벌 강화(여객법 시행령 개정) ▶ 교통수단 안전점검 포함(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) 	'21.1 '21.3 '21.6	국토부
④ 사업자 책임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고 다발 업체 사고 할증비율 상향 검토 	'21.12	국토부

2-2. 화물차 과적·적재불량 관리 및 단속

① 안전 단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판스프링 등 불법장치 합동 단속 ▶ 분기별 합동 과적단속 	연중	국토부 경찰청 지자체
② 검사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적재장치 정비 불량 등 검사 기준 강화(자관법 시행규칙 개정) 	'21.상	국토부
③ 과적·적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과적단속원 적재 제한 단속권한 확대(도로법 개정) ▶ 화물무게 허위기재 화주 처벌(도로법 개정) ▶ 적재불량 자동단속시스템 도입 ▶ 적재불량 시각화 자료 배포·교육 	'21.12	경찰청 국토부
④ 안전 순찰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고속도로 안전 순찰 ▶ 왕눈이 스티커 부착 등 	연중	국토부 등

2-3. 화물차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 등

① 차량 안전성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소형화물차 충돌기준 도입을 위한 안전기준(자동차 기준) 개정 	'21.12	국토부
-------------	---	--------	-----

과제 내용	추진계획	일정	부처
② 안전장치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차로이탈경고장치·비상자동제동장치 확대 ▶ 비상자동제동장치 전 차종 확대(자동차 기준 개정안 마련) ▶ 차로이탈경고장치 3.5t 이하 차량 선제 적용 	'21.7 '21.12 '21.상	국토부
③ DTG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DTG 통신기능 포함 제작기준 상향(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) 	'21.10	국토부
④ 비사업용 안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비사업용 화물·건설·덤프 등 안전강화 검토 	'21.12	국토부

3-1. 이륜차 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단속 강화

① 이륜차 관리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이륜차 생애주기별 종합관리체계 마련 ▶ 이륜차 번호판 체계 개편 검토 	'21.12	국토부
② 이륜차 배송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인증제, 표준계약서, 안전교육 등 관리 기반 마련 (생활물류법 하위 법령 마련) ▶ 플랫폼 업체 배달원 교육 강화 	'21.6 연중	국토부
③ 단속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이륜차 위법행위 안전 단속 강화 ▶ 후면번호판 단속 시범사업 추진 	연중 '21.9~	경찰청
④ 공익신고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이륜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확대 	차'21.1~ 차'21.5~	국토부

3-2. 안전용품 보급·홍보 및 PM 관리

① 안전용품 보급홍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안전모·반자판·반사지 등 안전용품 보급, 교육·마을방송 및 현수막 설치 등 홍보 	연중	국토부 등
② PM 관리체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률 제정 ▶ 민·관 협의체 구성·운영 	'21.6	국토부

3-3. 운전자 안전운전 및 책임성 강화

① 안전운전 책임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음주·무면허·뺑소니 사고 보험 구상 강화, 사고부담금 대상 확대 및 12대 중과실 대물 청구 제한(자배법 개정, '21) 	'21.12	국토부
② 위험운전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상습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강화(도교법 개정) 	'21.12	경찰청

과제 내용	추진계획	일정	부처
③ 음주 단속 강화	▶ 음주운전 단속·처벌 강화 ▶ 음주운전 방지장치 규격 마련 및 도입 검토	연중 '21.12	경찰청

4-1. 사고 예방적 도로 환경 조성 및 안전시설 확충

① 취약도로 개선	▶ 사고 잦은 곳, 위험 도로 집중 개선 ▶ 교통안전점검 차량 활용 점검·개선 ▶ 갓길 협소 구간 확장	'21.12	국토부 행안부
② 쉼터 확충	▶ 졸음쉼터 신규 설치 및 기존 졸음쉼터 개량 ▶ 화물차 라운지 신설 및 가변주차장 확대	'21.12	국토부
③ 안심도로 확산	▶ 안심도로(교통정온화시설) 공모전 시행	'21.8	국토부
④ 가로등 확충	▶ 스마트 가로등 설치 확산	'21~	국토부
⑤ 회전 교차로 설치	▶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 및 개선계획 수립	'21.12	행안부

4-2.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구조물·터널 관리 강화

① 교량비탈면 모니터링	▶ IoT 결합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	'21~25	국토부
② 터널 안전 시설	▶ 터널 방재 설비 보강 ▶ 터널 원격 제어체계 구축	'21.12 '21~22	국토부
③ 안전시설 확충	▶ 충돌 방호시설 성능조건 개선(지침 개정 추진) ▶ 위험구간 방호울타리 설치 확대	'21.12 '21~	국토부

4-3. 안전 운행 유도를 위한 도로 홍보·단속

① 안전띠 착용	▶ 안전띠 단속 장비 시범 운영 및 홍보	'21.10~	국토부 등
② 고속도로 합동단속	▶ 기관 합동 단속 강화	연중	경찰청 등
③ 단속장비 설치 권한	▶ 도로관리청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권한 확보(도로교통법 개정)	'21.상	경찰청

과제 내용	추진계획	일정	부처
5-1.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전방위 홍보			
① Key 메시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보행자 안전 홍보영상 제작·송출 ▶ 화물·이륜·PM 등 타겟별 홍보 강화 ▶ 안전띠 착용 홍보 강화 등 	연중	기관 합동
② 메신저 활용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홍보대사 및 인플루언서 등 활용 홍보 강화 	연중	국토부
③ 기관 협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관별 주요 채널 활용 집중 홍보 ▶ 민관 홍보 협의회 운영 ▶ 계절별·시기별 맞춤형 홍보 및 토론회 등 	연중	기관 합동
④ 맞춤형 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고령자·어린이·청소년 맞춤형 교육 시행 	연중	국토부 교육부 등
5-2. 범정부 교통안전 관리체계 구축·운영			
① 범정부 추진체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조실 점검협의회 및 실무 점검 ▶ 감축부진 지자체 현장점검 및 통계 배포 	연중	국조실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등
② 도로 관리체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고속도로·국도 등 기관 합동 점검·시설개선 ▶ 국토청 내 교통안전조직 설치 	연중	국토부 등
③ 지역별 안전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중앙-지자체 분기별 교통국장급 점검회의 ▶ 지역교통안전 협의체 활성화 	연중	국조실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등
④ 지자체 안전노력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교통사망 제로 달성 지자체 포상 등 	'21.12	국토부 등